

大企業은 사회적 責任다해야 ……

倫理的 규범에 制度的장치 필요

張 源 宗

東國大 教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0대재벌이 총여신의 43.2퍼센트를 차지하고, 연간 부가가치액은 82년 GNP의 16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품목에서보면 이들 30대기업이 6백19개의 중소기업 분야의 품목을 포함하여 1천4백39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호텔·건설·부동산·운수·해운·보험·증권·유통분야까지 포함한다면 재벌기업은 구멍가게에서부터 첨단 산업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없고, 최근에는 독점의 최종단계인 금융까지 손에 넣음으로써 거의 완벽한 재벌화 시대의 형성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그동안의 누적적인 정책과 이에 편승한 기업의 쌍방에서의 상승적인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소위 귀속재산이라는 적산(敵産)의 불하,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 시대의 인플레이 소득, 외원자금(外援資金)이라는 달러유선에 의한 치부, 62년에 경제개발계획 출범 후 수출일변도의 고속성장정책에 따라 온갖 세계·금융상의 지원 등이 지극에 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비판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모두 이렇게 해온 것은 아니고, 자본형성·경영·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범적인 중소기업, 대기업도 적지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 의한 무도한 팽창주의를 정책적으로 제때에 제동을 걸지 않고, 지나치게 대형화주의가 옹호되었다는 점이 오

늘에 와서 크게 문제가 되고, 기업윤리면에서도 적지않게 자성(自省)을 촉구하는 소리를 높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일부 기업의 팽창주의·대형화가 촉진된 논리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었다. 시설규모가 국제규모에 달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한편 기술·개발투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 아래 차관도입이 장려되고, 안에서는 집중적인 금융지원과 세계상의 배려가 뒤따랐다.

대형화된 기업은 많은 취업기회를 창출, 실업자를 흡수했고, 수출증대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대과학(big science) 시대에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요하는 첨단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고 이같은 도전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내고도 있다.

그림의 수출입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 수송비나가는 것이 아깝다 해서 해운회사를 만들고, 보험료를 외부에 지출하느니 아예 보험회사를 차리고, 증권이 수지맞는다고 판단되면 증권회사를 만들기도 한다. 아파트단지들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소비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쇼핑센터를 차린다. 해외 수출 근로자의 항공수수료가 아까워 여행사를 차리고, 광고수수료의 외부지출을 막느라고 광고대행회사까지 만들고, 영세기업의 극히 소량의 원료·부품의 납품대금마저 연불어음으로 결산한다. 또 큰 건설업체와 하청기업 사이의 계약과 거래관계에 있어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널리 알

러진 사실이다. 공사를 하청 주는 계약단계에서 계약금액을 후려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대금의 지급 과정에서도 선급금을 주지 않거나, 기성공사의 대금지불을 늦추는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습이 고질화되어 왔으며 이것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대형건설업체의 부정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 거래 풍토는 비단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종합상사와 수출하청업체 사이, 그리고 이밖에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나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지않게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국이니 중소기업은 발붙일 구석이 없고 근로자나 일반소비자도 박봉과 불량상품에 비싼 가격으로 시달림을 받는 사례는 너무도 많았다.

30대 재벌이 GNP의 16퍼센트를 차지한다면 가히 공룡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공룡만으로 경제계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기술혁신·생산성 향상이나 능률, 근로자 복지보다도 그룹의 지탱이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 밖의 탈선도 불사하게 되고, 이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정적이 뒷수습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리기도 한다.

이같은 재벌화와 부의 집중을 가져오게 한 것은 기업의 탐욕스런 작태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제도적 기구와 그 운영질서, 정책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금융제도와 그 운영질서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어 정상적인 패턴에서 이탈되어 나왔다는 것이 금융특혜의 집중과 소외의 양극적 현상을 빚게 하는 동시에, 갖가지 대형금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왔다. 한편 담보위주의 금융은 담보력과 기업신용에 중점이 두어지고, 또 수출에 금융의 우선순위가 두어지다 보니 부득이 금융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종합상사제도는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는 자유경쟁체제의 경제에 있어 경제 헌법에

해당하는 독과점규제법과 이 법의 집행기구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부재상태에서 경제개발이 추진되어 나왔기 때문에 자본과 부의 일방적인 집적과 집중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제 5공화국 출범 후 비로소 독과점규제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이 독점의 원인규제보다는 사후적 폐해 내지 불공정거래의 폐해 규제에만 치중되어 있고, 또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한정된 인원과 기구로 인한 집행능력의 한계,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고 해서 독과점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기능을 수행해 주지 못하고 있다.

세째는 자본시장의 육성과 기업공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칭 큰손들에 의해 거듭된 증권과동과 시장운영상의 잘못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높게 하였다. 그밖에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우리나라 증권인구는 아직도 60여만 선에서 맴돌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소되는 경향조차 없지 않다. 한편 기업공개라고 하지만 독과점규제법 등에 의한 강력한 주식의 독과점 억제책이 미흡했던 탓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아직도 가족중심의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주주의 사실상 주식지분(株式持分)은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어 주식공개가 아직도 단초적(端初的)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세가지 원인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의 실패, 노사활동의 규제, 소득분배의 형평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미흡 등 이런 저런 원인이 가세되어 기업집중·재벌화 현상은 단시일 내에 급진전되어 나왔다. 대기업들의 재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에 이에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기업의 대형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속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며 정책적으로도 유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각 그룹별로 너무도 과다한 기업을 거느리면서 대외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주력기업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때문에 중소기업 부문까지 대기업이 광범하게 침투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로 과다한 계열 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 하나의 구성기업은 물론, 그룹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재무구조가 극히 열악하여 막대한 내·외채의 상환부담이 누적되어 이것이 국민경제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많은 재벌기업이 가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족경영의 비능률도 문제이지만, 주식공개가 제대로 될 수 없어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경제개발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인구(상장회사 주주 총수)는 63만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인구는 이의 절반을 밑돈다는 게 일반적인 추산이다. 한 사람이 몇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휴먼구좌가 많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식인구는 78년 이후 크게 감소하기만 했다.

이런 직접투자자뿐 아니라 지난해는 투자신탁사를 통한 간접투자자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투신」의 개인고객은 1만2천명이 줄었고, 우리사주조합 저축액도 80년의 4억2백만원에서 82년에는 2억9천6백만원, 최근에는 2억2백만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세금감면과 공모주 우선청약권 등의 혜택이 있는 증권저축만이 80년 1백4억원에서 1백82억원(82년)을 거쳐 현재 1백84억원으로 늘어 가입자가 늘었을 뿐이다.

주식보유 분포를 봐도 10만주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법인·개인(주주대)등 5천구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보유량은 총주식의 54.8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만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8퍼센트로 총주식의 83퍼센트를 갖고 있다. 결국 몇몇기관투자자와 대주주에 의해 주식이 독점되어 왔다는 풀이가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자본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 대기업을 육성할 수도 없거니와, 한편 기업이윤이 사회로 환원될 수도 없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보호육성책도 긴급하고 적정배당 등의 유인책으로 숨은 돈을 최대한 긴급하고 적정배당등으로 숨은 돈을 최대한 증권시장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미국에서 자산규모 1천5백50억달러, 고용인원 1백만명, 연간 수출액 1백70억달러로 세계 최대의 기업인 AT & T사가 84년 1월을 기해 8개지주회사(持株會社)와 30개의 군소회사로 분할·해체된다. 독점금지법에 따라 지난해 8월 법원의 해체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AT & T사가 초거대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판이한 점은 주식이 각계각층에 분산되어 주주가 무려 3백2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기업이지 어느 특정개인이나 가족의 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분할·해체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내려진 것이다.

이윤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경쟁체제인 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거대 독과점기업이 나올 수 밖에 없으나 여러가지 독점형성의 원인규제와 폐해규제를 통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규범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규제해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정도이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윤리는 개별기업의 자속에만 호소해서는 별반 실효성이 없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윤리적 규범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유도·규제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이같은 제도적 규제장치와 더불어 기업인 스스로가 경제적 윤리질서를 지켜 나가는 자성적 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國家技術資格檢定試驗問題解答 *

해답 소방설비에 관한 구조와 원리

16.㉔ 17.㉔ 18.㉔ 19.㉕ 20.㉕ 21.㉖ 22.㉖ 23.㉕ 24.㉕ 25.㉕

소방관계법규

1.㉕ 2.㉖ 3.㉖ 4.㉖ 5.㉖ 6.㉕ 7.㉕ 8.㉕ 9.㉕ 10.㉕ 11.㉖